

국가NPU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예산 투입에 달렸다

안도걸·서왕진, 정부예산심의서 반영 주장

정부 “적극적으로 살펴 보겠다” 긍정적 답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광주시당원위원장)이 ‘광주 국가 AI(인공지능) 시범도시 도약’을 위한 예산을 잇따라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지난 10일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에서 “광주 AI 컴퓨팅지원센터에

관한 고민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확실한 후속 조치와 신속한 이행계획을 약속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실패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광주가 명실상부한 AI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컴퓨팅지원센터를 능

가하는 핵심인프라를 구축해 광주시민들의 상실감을 신뢰와 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 NPU(신경망처리장치) 전용 컴퓨팅 센터 설립 △국가 AI 연구소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 컴퓨팅 자원·시설·인력 고도화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 조성 등 4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들 대안이 실질적 프로젝트로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만 광주 시민이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운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 살펴겠다”고 답했다.

서왕진 의원은 같은 날 예결위 심사에서 “광주와 전남이 연계해 ‘학습·추론·활용’ 전주기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일관된 추진과 국가적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무산 사태와 관련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사업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가 민간의 판단과 이익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과제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무산 이후, 지역에서는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마저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고,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 과정에서 지역 연계성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광주 지역 실증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광주는 실증·서비스, 전남은 컴퓨팅·인프라 역할을 담당해 AI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다”며 “광주·전남의 AI 생태계 구축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하고, 산업 현장에서 구축되는 AI 인

프라를 실증·서비스·사업 확산과 연계해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가 제안한 △1단계 데이터센터 고도화 및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구축 검토 △AI 실증사업 확대와 사업과 지원 강화 △AI 연구소설립 및 인재 양성 등 세 가지 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광주와 전남은 충분히 AI 시범도시·실증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11일 오후 광주 서구 보건소 보건교육장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이 대한응급처치교육센터 강사들로부터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로 광주시 AI정책 다듬는다”

시의회 시특위, 지역 기업과 첫 조찬간담회

광주시의회 인공지능실증도시특별위원회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 AI 기업 관계자들과 ‘제1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AI기업들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AI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제조업에 대한 AI교육 및 지원 신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속 지원 강화, 지역 AI기업과 중소기업 및 뿌리기업 연계 지원책 강화, 중앙이전 기업과 지역기업 간 상생 방안, 기업 맞춤형 AI사관학교 인제양성, 공공기관

공간제공형 AI실증사업의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민 광주 9대산업협의회 인공지능분과장은 “AI는 빠르고 제조는 느리다. 중간에 미드필더가 필요하다. 뿌리산업 및 소부장산업 등 제조업 현장에서도 고령화에 따라 AI를 접목해 돌파구를 찾고 싶어한다”며 AI기업과 연구기관, 제조업 간의 소통과 AI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아이티엠텍 조준호 대표는 “(광주 AI데이터센터 이용과 관련) 6개월씩 사

용하는 GUP 사용기간을 최소 12개월로 해주고, 매년 새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갱신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세영 ㈜엑스알에이아이 이사는 “콘텐츠 기반 AI기업은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쌓아야 한다”며 “광주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장소 제공형 중심의 실증사업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오늘 기업인들께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정리해 광주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장 반영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그 이유와 한계를 명확히 피드백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AI산업의 주체는 현장에 있다. 기업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전문가의 지혜로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AI특위는 연말까지 광주 AI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11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총 6차례에 걸쳐 AI기업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정책 수요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이어 1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광주 AI정책의 중장기 방향, 법 개정 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와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제2차 조찬간담회는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에 열리며, 김운성 광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이 ‘AI 모델 발전 트렌드’를 주제로, 광주인공지능융합사업단이 ‘광주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1년 국제포럼

광주시·ACC, 내달 10~11일 쏠전당서 개최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행사를 공동 추진한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1일 광주비엔날레 회의실에서 ‘2025 제2차 정례협의회’를 열고 지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다음 달 10일과 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행사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5·18민주화운동 배경의 소설 ‘소년이 온다’ 등을 집필한 한강 작가는 지난해 10월 10일 스웨덴 한림원에서 노

벨문학상 수상자로 공식 발표됐다.

시와 ACC는 또 내년 9월 열리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해외 파빌리온 전시공간 일부를 ACC에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광주에서 개최하는 ‘2028 전국체육대회’ 연계 문화·체육 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25일 ACC 개관 10주년 기념식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문화·기술·예술이 어우러지는 아시아문화중심 3.0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1주년 기념식 등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시철도 2호선 영터리 실시설계로 공사 지연”

심철의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상인 피해 대책 촉구

심철의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사진)이 11일 지하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상인 피해의 근본 원인이 영터리 실시설계와 행정의 의지 부족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이 고스란히 상인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영업용 아예 못하게 막은 경우’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길을 막아 한 번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은 보상이 되고, 공사 펜스로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상이 안 되느냐”며 문을 열수록 손해를 보는 상인들이 ‘말

라 죽고 있다’고 절박한 현실을 전했다. 또 심 의원은 공사 지연의 핵심 원인을 ‘영터리 실시설계’로 규정했다.

그는 공법, 지장물, 지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실시설계의 목적인데도, 공사 중 암반이 나오고 지장물이 발견돼 공사가 지연된다는 변명 자체가 ‘실시설계가 영터리’였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렇게 변수가 많을 거면 실시설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1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와 용역비, 보고서 일체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복지·농민수당 ‘줬다 뺏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종덕 “조삼모사식 시범사업 중단하고, 정부 재정비율 높여야”

정부가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오히려 농민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을 삭감해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며 “줬다 뺏은 조삼모사식 시범사업 중단하고 정부 재정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지자체들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농민

수당·아동수당·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전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개 지자체들이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 및 농업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 순창군은 올해 기본소득 예산 204억원 편성 과정에서 아동행복수당 22억원, 청년종자통장 7억원, 농민수당 103억원 삭감했다.

강원 정선군은 약 280억원 확보 위해 어르신 목욕비·아·미용비, 청소년 복지

예산 삭감 및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보류했다. 경북 영양군은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사회복지예산 등 지역발전 재원을 축소해 373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국비40% 지자체 60% 비용부담으로 설계돼 당연히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평균 42.3%의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자체별 분담 비율도 30%부터 60%까지 편차가 컸다.

전 의원은 “지역 복지와 농업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단순한 예산조정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 실행”이라며 “특히 지방비 60% 부담 구조로 설계한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중앙정부는 생색내 내고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겨 농촌의 균형

발전 취지는 시작도 전에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름만 바꾼 복지 재탕, 본질은 ‘줬다 뺏은 정책’으로 표면적으로는 시범지역 주민이 더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복지예산을 돌려 넣는 ‘오픈 주머니에서 원 주머니로 옮기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농민수당, 아동·청년 지원사업 등 기존 복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명목상 기본소득 확대 정책으로 둔갑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의 삶을 지키는 제도여야 하며, 기존 복지나 농업예산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재원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비 비율을 확대해 주민 피해 없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청년·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대부료 1% 인하

기재부, 시행령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이 정부 소유의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활용할 때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에게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의 대부(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한경쟁입찰 시 추첨을 통해 낙찰자들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 일괄 납부 가능 대상은 기존 대부료 2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지번으로 국유재산을 보유할 경우, 과거에는 1회에 한정해 보수 비용만 큰 대부료를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횡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개선한다.

대부료 체납 발생 시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납부 고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